2016년 교육행정직 9급 행정학(16. 6. 18) - B책형

출제유형분석

총론	3	재무행정론	3
정책론	3	정보화사회와 행정	–
조직론	3	행정환류	1
인사행정론	4	지방행정론	3

0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해치법(Hatch Act)
② 직업공무원제 확립
③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④ 관료의 정책형성 기능 확대

해설 ① [○] 해치법은 미국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법이다.
② [○] 직업공무원제는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③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여야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대두되었다. 관료의 정책형성 기능 확대는 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542

▶ ④

02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공항 건설은 재분배 정책이다.
ㄴ. 공공건물 금연은 규제 정책이다.
ㄷ. 탄소배출권거래제는 분배 정책이다.
ㄹ. 공무원연금제의 개정은 구성 정책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ㄹ

해설 ㄱ [×] 신공항건설은 분배정책이다.
ㄷ [×]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규제정책이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187

▶ ②

03 하향적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② 집행과정에서 현장을 강조하고 재량권을 부여한다.
③ 정책목표와 수단 간의 타당한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
④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하향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해설 ① [○] 하향적 정책집행은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를 중시하므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
② [×] 집행과정에서 현장을 강조하고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향적 정책집행이다.
③ [○] 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의 연구에서 하향적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긴밀한 인과관계를 포함한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④ [○] 하향적 정책집행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많은 집단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용이 어렵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270~272

▶ ②

04 학습조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체계와 자아실현적 인간관에 기반한다.
② 자극·반응적 학습을 주된 방법으로 활용한다.
③ 역량기반 교육훈련제도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④ 핵심 가치는 의사소통과 수평적 협력을 통한 조직의 문제 해결이다.

해설 ② [×] 학습조직은 자극·반응적 학습이 아니라 집단적 학습을 주된 방법으로 활용한다. 집단적 학습은 구성원 간 진정한 대화와 집단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 개인적 능력의 합계를 능가하는 지혜와 능력을 구축하게 하는 것이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352

▶ ②

05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무현 행정부는 예산효율화를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김영삼 행정부는 지방분권화를 위해 내무부의 지방통제기능을 축소하였다.
③ 이명박 행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 통폐합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④ 김대중 행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설 ① [○] 노무현 행정부는 예산효율화를 위해 4대 재정개혁을 단행하였으며, 2007년 프로그램(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 김영삼 행정부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내무부의 지방통제기능을 축소하고, 내무부와 총무부를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를 만들었다.
③ [○] 이명박 행정부는 민영화, 부처 통폐합 등 작은 정부 구현정책을 공식화하였다.
④ [×]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노무현 행정부 때 도입되었다. 김대중 행정부는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에 기반 하여 작은 정부, 봉사하는 정부, 위기 관리를 목표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763~765

▶ ④

06 행정학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은 적실성, 참여, 변화, 가치, 사회적 형평성 등에 기초한 행정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한다.

② 뉴거버넌스론은 계층제를 제외하고 시장과 네트워크를 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 및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되었으며, 주로 민주적 시민이론, 조직인본주의와 담론이론 등에 기초하고 있다.

해설 ② [×] 뉴거버넌스는 기존의 계층제(정부)에 의존하는 거버넌스와 달리 계층제와 시장, 시민사회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새로운 흐름을 말한다. 계층제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125, 149, 158, 173

▶ ②

0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는 자치구를 두고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 보통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설 ① [×]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안에는 자치구를 둘 수 없으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구를 두고 있지 않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를 두지 아니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791~794

▶ ①

08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제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직기간 상한을 최대 36년까지 인정한다.

② 유족연금 지급률을 모든 공무원에게 60%로 한다.

③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한다.

④ 연금지급률을 1.9%에서 1.5%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해설 ③ [○] 종전에는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고 있었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하여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하였다.

④ [×] 연금지급률은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개혁방향(2016. 1. 27 시행)〉

	종 전		('16. 1. 1 시행)
1. 연금지급률 인하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1.9%	⇨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1.7% • 2035년까지 단계적 인하 • 1%에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2. 공무원 기여금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7%	⇨	기준소득월액의 9% •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3. 연금산정 시 소득상한 인하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
4.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 2009년 이전 : 60세부터 • 2010년 이후 : 65세부터		임용시기 구분 없이 65세부터 • 퇴직연도별 단계적 연장
5. 재직기간 상한 연장	최대 33년까지 인정		최대 36년까지 인정 • 재직기간 21년 미만부터 단계적 연장
6. 유족연금지급률 하향 조정	• 2009년 이전 : 70% • 2010년 이후 : 60%		전·현직 공무원 모두 60% 적용 • 개정법 시행 이후 유족연금 사유 발생자부터
7. 최저복무기간	20년		10년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530

▶ ④

09 공무원의 부패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금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부정 등은 사기형 부패에 속한다.

② 법에 규정하기는 곤란하여 윤리강령에 규정하는 부패의 유형은 회색부패에 속한다.

③ 대부분의 부패행위는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는 부패는 조직 수준의 부패이다.

④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이른바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제도화된 부패의 예이다.

해설 ③ [×] 부패행위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조직부패이다. 조직부패는 하나의 부패사건에 여러 사람이 조직적 혹은 집단적으로 연루되어 있어 부패행위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552, 553

▶ ③

10 예산집행과 관련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집행은 재정통제와 재정신축성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③ 예비비로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고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②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46조 제1항).

③ [×] 공무원 보수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

> 국가재정법 제22조 【예비비】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④ [○]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 동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649~654

▶ ③

11 다음의 분류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 분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가)	(나)
비경합성	(다)	(라)

① (가) 재화는 시장에 맡겨 두고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나) 재화에 대해 정부는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 규칙을 설정한다.

③ (다) 재화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독점에 의한 시장실패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 (라) 재화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한다.

해설 ① [×] 시장재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영역이다. 하지만 계층 간 수직적 형평성이 강조되면서 기본적인 수요조차도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배려를 위한 부분적인 정부개입이 발생한다.

구 분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가) 시장재	(나) 공유재
비경합성	(다) 요금재	(라) 공공재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40~42

▶ ①

12 조직의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합형 협상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제로섬 방식을 기본 전제로 하는 협상이다.
② 수평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 구조, 과업의 상호 의존성,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발생한다.
③ 집단 간 목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상위 목표를 제시하거나 계층제 또는 권위를 이용하여 해결한다.
④ 조직의 불확실성을 높이거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이 조직의 갈등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전략은 조직의 생존·발전에 필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해설 ① [×] 분배적 협상에 대한 설명이다. 분배적 협상이란 제로섬(zero-sum)게임의 상황에서 각각의 입장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각 입장이 강경할 땐 승패의 상황이, 부드러울 땐 부분적 양보로 갈등을 타결하는 것이다. 반면, 통합적 협상이란 전체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을 둔 것으로 당사자들이 모두 승리자(win-win)가 될 수 있도록 공동이익을 키우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414~416

▶ ①

13 정책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점증모형은 집단의 합의 과정이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
ㄴ. 만족모형은 대안 선택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ㄷ. 회사모형은 조직이 단일한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라고 가정한다.
ㄹ.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 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해설 ㄷ [×] 회사모형에서 조직은 유기체가 아닌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연합체로 가정한다.
ㄹ [×]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은 점증모형이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249~254

▶ ①

14 조직상황 요인과 조직구조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규모가 커질수록, 분권화 정도가 높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② 조직환경이 불확실할수록, 분권화 정도는 높고 공식화 정도는 낮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③ 조직이 방어적 전략을 추구할수록, 공식화 정도는 낮고 분권화 정도는 높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④ 조직이 비일상적인 기술을 사용할수록, 분권화 정도는 높고 공식화 정도는 낮은 조직구조가 적합하다.

해설 ③ [×] 조직의 방어적 전략(저비용 전략, 안정적 전략)을 추구할수록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다. 즉, 높은 복잡성·공식화·집권화(낮은 분권화)를 특징으로 하는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다. 차별화 전략(모험적 전략)을 취하는 경우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

〈상황변수와 조직구조〉

구 분	규모(증가할수록)	기술(비일상적 기술일수록)	환경(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복잡성	+	+	+
공식성	+	−	−
집권성	−	−	−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325~334

▶ ③

15 지방세 체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시의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광역시세가 아니고 구세로 한다.

② 광역시의 군지역은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되지 않고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된다.

③ 시·도는 지방교육세를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의 재산세는 특별시분과 자치구분으로 구분하고, 특별시분은 구의 지방세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차등분배하고 있다.

해설 ④ [×] 원래 재산세는 자치구의 세목이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재산세를 특별시세(50%)와 자치구세(50%)로 공동과세하며, 재산세 중 특별시세에 해당하는 50%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 배분(차등 배분×)하여 교부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845~847

▶ ④

16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서비스 중 민원 행정은 전달적 행정이며 정치적 관심의 영역이다.
ㄴ. 행정서비스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 중심의 서비스 특징을 지니고 있다.
ㄷ. 행정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된다.
ㄹ.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평가제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해설 ㄱ [○] 민원행정은 일반 국민과 접촉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이며, 국민의 요구(민원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관심의 영역이다.

ㄴ, ㄷ [○] 행정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제공되며, 민원행정을 국민이 원하는 행정이라고 넓게 볼 때 국가의 대부분의 행정서비스는 민원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ㄹ [○]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평가제도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개혁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제도이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해 서비스 사용자인 고객이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자(고객)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상태를 평가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45, 155~157

▶ ④

17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다.

② 현행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순서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순이다.

③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에게,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원에,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다.

④ 주민소송의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 중 공금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대·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해설 ① [○]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

③ [×]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감사청구는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④ [○] 지방자치법 제17조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828~837

▶ ③

18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여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②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한다.

③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경우 공히 임용기간 만료 후 원소속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④ 공모직위제도는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경력직 고위공무원단 직위 수의 30% 범위에서 지정한다.

해설 ① [×] 경력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③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이하 "경력개방형 직위"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경우 임용기간 만료 후 원소속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476~479

▶ ①

19 우리나라 통합재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통계 작성기준을 기초로 작성 및 발표한다.

② 금융 공공부문 및 비금융 공공부문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과 세입세출외 자금을 포함한다.

③ 회계 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하다.

④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해설 ① [○] 통합재정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기준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라는 이름으로 월별 작성·발표되고 있다.

② [×] 통합재정은 비금융 공공부문을 의미한다. 통합재정에는 비금융 공공부문인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하며,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포함된다. 금융공공부문은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 통합재정은 재정건전성 파악을 위해 보전거래, 이중거래,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세출·순세입의 규모로 작성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613~615

▶ ②

20 우리나라 성인지(性認知)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히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ㄴ.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ㄷ.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국회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예산안이나 결산서와는 독립적인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해설 ㄱ, ㄴ, ㄷ [○]

>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 성인지예결산서는 예산편성안과 결산안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608, 609

▶ ②